

# 호남에 손 내미는 민주당... 추락하는 '쌀값' 안정화 촉구

쌀값, 전년 수확기 대비 20.6%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의 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의 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멀어진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세는 기록적이다. 지난달 15일 산지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4만 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 3535원 대비 20.6%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이다. 급기야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과 소비량 감소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으나 최저가 입찰 역 공매 방식을 택해 오히려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꼴이 됐다. 특히 올해 기준 전체 논벼 재배면적의 37%를 차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의길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쌀값 폭락 및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마련과 윤석열 정부의 농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로에 쌀을 뿌리고 있다. /뉴스시스

하는 전남북의 농심(農心)은 더 암울하다. 전남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삼석, 윤재갑, 신정훈,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총궐기 대회를 찾아 집회를 함께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요건 충족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대

민생 입법으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30일 최고위 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두고 "최근에 80kg 한 가마에 22만원 하던 것이 17만 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추석이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시길 것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쌀값마저 잡지 못하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 분석이다.

호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연이은 지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며 피로감을 키웠다. 20대 대선에서 호남은 80%대 투표율을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지선에서 광주가 투표율 37.7%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도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이 각각 37.52%와 34.18%를 기록하는 등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평이 나왔다.

쌀값 폭락 사태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당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내 쌀값안정화TF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급 말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삼고시대인데, 유독 쌀값만큼은 폭락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쌀값 20만 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쌀이 원론적으로 다시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인 것은 간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새 비대위 출범 '삐그덕'... 내홍 수습 관건

與 당헌 개정안 작성 전 일부의원 반발 안철수 의원 "반대 의견 꽤 있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안철수 의원은 1일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방침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이 없다. 정당 운명을 도박하듯이 맡겨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실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최고위 복귀)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새 비대위 출범 방

침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 기록을 갖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 쪽으로만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발표하는 사람들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그 절차들을 거치면 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조경태·윤상현·유의동·하태경 의원 등도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 추진 등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 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과 토론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 우리 당론이고, 절대 다수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초·재선 의원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각각 초선 및 재선 의원 모임을 갖고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데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의총 결정에 따르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첫 작업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가 2일 소집된다. 상전위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권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 절차까지 밟는다.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소집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가 열릴 가장 빠른 날짜는 5일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등 구성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때와 같이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상전위로부터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해 처리되면 절차가 끝난다. 당 지도부는 문제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면,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주요 인사 2선 후퇴에도 새 비대위 출범 반발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비대위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않는 한,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이 부결되거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김진표 "국민이 환영하는 소식 위해 노력"

(국회의장)

"심사·국정감사 만전 기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있을 예산심사·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던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

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두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尹 대통령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설계"

위기가구 찾아 애로사항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의 전환' 기조에 맞춰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최근 수원시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장애 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언급과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찾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